

한국블록체인협회 · 글로벌금융학회 · 최운열 국회의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ISSN 2671-8693
제2권 제2호 | 2020년 2월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DATE

2020.2.4(화) 14:00~16:00

VEN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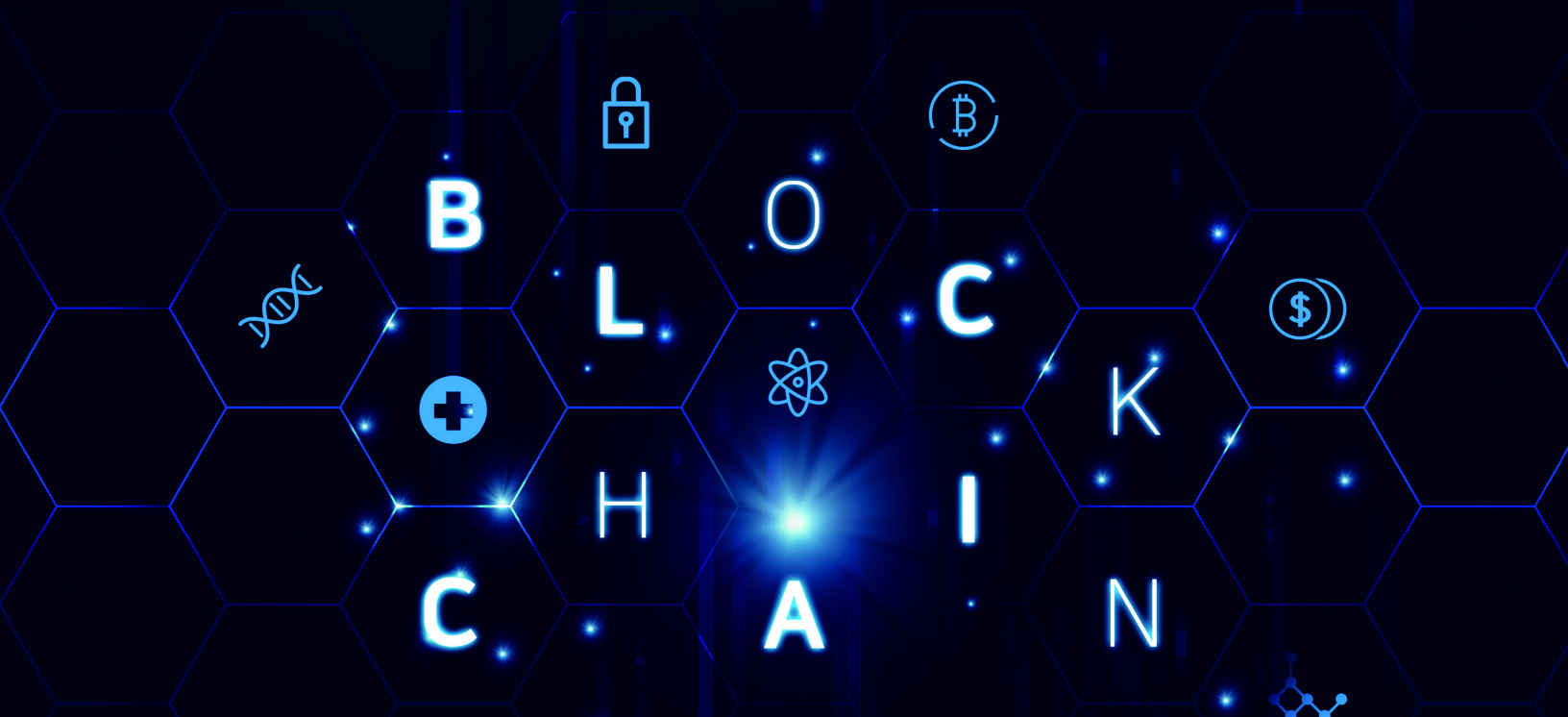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주최 : B 한국블록체인협회



최운열 국회의원

후원 :  조세정책학회
TaxPolicy Association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 일 시 : 2020년 2월 4일 (화) 14:00 ~ 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 최 : 한국블록체인협회 · 글로벌금융학회 · 최운열 국회의원
- 후 원 : 한국조세정책학회

○ 세부일정

| 프로그램 | | 시간 | 내용 |
|----------|----------|-------------|--|
| 내빈소개 | | 14:00~14:05 | 주요내빈 및 강연자 |
| 개 회 사 | | 14:05~14:10 |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 글로벌금융학회장 |
| 환 영 사 | | 14:10~14:15 | 최운열 국회의원 |
| 사진촬영 | | 14:15~14:20 | 주요내빈 및 강연자 |
| 발 제 | | 14:20~14:50 |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 토론 세션 | 좌장 | 14:50~15:50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
| | 토론 패널 | |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장 (前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울촌 세제팀장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하 가나다순 |
| 질의응답 | | 15:50~16:00 | 질의응답 |
| 폐 회 | | 16:00 | 폐회 |

목 차

개회사

| | |
|----------------------------------|---|
| 오 갑 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 글로벌금융학회장 | 6 |
|----------------------------------|---|

환영사

| | |
|------------------|----|
| 최 운 열 국회의원 | 10 |
|------------------|----|

발 제

| | |
|-----------------------------|----|
| 김 병 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15 |
|-----------------------------|----|

토 론 좌장 :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

| | |
|--|----|
| 암호화폐 거래의 제도권 편입에 따른 바람직한 과세방향 검토 / 강남규 | 49 |
| 가상화폐 과세방안 토론문 / 김용민 | 55 |
| 가상화폐 과세방안 / 안경봉 | 62 |
| 암호화폐 관련 김병일 교수님 발제에 대한 토론문 / 장재형 | 70 |
| 가상화폐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 정승영 | 73 |

개 회 사

한국블록체인협회장 · 글로벌금융학회 회장 오 갑 수



2020년 경자년을 맞으시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더욱 큰 성취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와 cryptocurrency(가상통화)의 발전에도 새로운 시작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상통화에 관하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여야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서 당국의 감독 아래 제도권 안에서 가상통화거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건전하고 투명한 블록체인산업과 가상통화시장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주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와 가상통화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와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터넷발전으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digital transformation의 변화 속에 Amazon, Google, Facebook과 같은 tech giant는 중앙집중적 platform 경제를 구축하여 독점적 power를 형성하고 있어 경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산화(decentralization)가 핵심인 블록체인과 cryptocurrency가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고 향후 decentralized open platform의 발전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원천인 조세제도는 경제성장과 산업 및 시장의 발전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며 가장 유효한 경제 사회와 복지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조세정책부터 혁신하는 이유입니다.

블록체인 cryptocurrency는 통화와 같은 지불수단으로서 상거래와 결제 금융 등에 활용되어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EU에서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와 전문투자자 중심의 현 경제제도에서 투자를 하거나 경영을 맡지 않고서는 일반 소비자와 국민이 기업활동에 참여하여 그 성과에 대한 과실분배를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cryptocurrency가 진화하고 활성화되어 나가면 소비자와 국민도 이해관계자 (stakeholder)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그로 인한 과실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와 금융 활동 및 그 성과 배분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민주화의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블록체인 cryptocurrency에 대한 조세제도와 과세방법은 많은 나라가 선점하려 하고 있고, 한때 세계 리딩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기업 그리고 cryptocurrency 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며 발전해 나가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cryptocurrency 시장이 4차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와 융합하여 지속가능하게 진화하고 발전하여 경제와 금융에서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조세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해주시는 최운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를 해주시는 김병일 교수님, 좌장을 맡아주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과 패널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강남규 법무법인가온 대표변호사님, 김용민 전 재경부 세제실장님,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님, 장재형 법무법인율촌 세제팀장님,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패널을 organize 해주신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cryptocurrency 과세의 global standard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4일

오 갑 수

환영사

국회의원 최운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입니다.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와 이에 따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자본이득세로, 일본에서는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할 때 과세 그 자체보다 실질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거래자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가상자산 취급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주장해오면서 강조하는 원칙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과세편의를 위하여 거래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타 소득으로 일률적인 세율을 부과하기 보다는 실제 양도로 실현된 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실질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체계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수반되는 세부적인 과제들이 많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경청하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 및 정책을 추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4일

최 윤 열

발 제 문

김 병 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가상화폐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2020년 2월 4일

목차 | CONTENTS

1 서론

2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의 논의 상황

3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4 가상화폐 구체적인 과세방안

5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이익 과세문제

6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한 과세문제

7 결론

I. 서론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 Fintech, Block chain, IoT, Big data, AI

- ① 디지털화 물결의 확산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 증대
- ② 가상화폐는 분산화, 전자적 거래, 가치의 전자적 표시, 법정통화와의 교환 등의 특성을 지님

▶ 가상화폐의 거래현황

- ① 가격의 큰 변동성에 의한 단기간 매매차익 실현 가능성으로 투자의 수단으로 인식
- ② 2020.1.30. 08:40 현재 세계시장에서 5,076종의 암호화폐가 20,325개의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며, 1일 거래량은 약 1,134억달러, 시가총액은 약 2,573억달러에 달함
 - 시장점유율은 비트코인이 66.2%로 수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및 리플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③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2017.4.27. 1비트코인 당 거래가격은 약 140만원, 2018.1.6. 2,598.8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여 약 18.5배가 상승
 - 2020. 1. 30. 17:52 기준으로 1,062.6만원에 거래

I. 서론

가상화폐의 미래 결정요인

비트코인 ETF
(Exchange Traded
Funds)의 승인

- 미 SEC 2020.2로 연기

확장성(scalability)
의 문제

- 데이터 처리 속도 등

가상화폐의 규제 정도

- 과세제도
- ICO관련 법제도 정비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기업 진출

- 모넵스(Monex) 그룹의
규인체크 등

가상화폐 거래소 체제

- 해킹 방지 등 보안 · 안전성

가상화폐의 실용화

- 자금세탁 등의 부정방지,
결제수단으로의 도입 가능성

I. 서론

▶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 정립 필요성 증대

- ◎ 2017년 가상화폐 가격의 급상승으로 거액의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규정의 미비로 과세형평성 저해 문제 발생
- ◎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가상화폐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

II.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의 논의 상황 1. 다양한 용어 사용 및 그 변천

가상통화 · 화폐(virtual currency)

- 대체로 중앙은행 ·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를 의미
- 미국 국세청(IRS)
: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functions as a medium of exchange, a unit of account, and a store of value other than a representation of the United States dollar or a foreign currency
- 일본 : 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2017년 시행)
- 불특정한 자에 대해서 대가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 기록되며 이전할 수 있고, 법정통화 또는 법정통화표시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적가치
- 우리나라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2018. 1. 30시행)
-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암호화폐(cryptocurrency)

- P2P 방식의 탈(脫)중앙집권적 분산형 시스템을 갖춘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를 암호화폐라 칭함
- IRS Revenue Ruling 2019-24
-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에 디지털로 기록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cryptography)를 사용하는 가상통화 유형

II.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의 논의 상황 1. 다양한 용어 사용 및 그 변천

가상자산(virtual asset)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FATF)는 가상통화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사용
 -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되며 지불이나 투자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디지털화된 가치의 표상. 다만, 법정화폐나 증권 등 제외
- 우리나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가상자산 규정 마련

암호자산(crypto-assets)

- 2018년 7월 G20 회의에서 가상통화를 암호자산으로 통일
- 일본정부는 2019년 3월 15일 자금결제법 등 가상통화라는 법령상의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기로 각의결정 (2019.5.31 성립, 2020.6 시행)

II.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의 논의 상황 2. 경제·금융의 디지털화

-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의 접목을 통한 금융 등에서의 활용
 - 법정화폐 디지털화 등
 - ☆ 중국 인민은행 : 디지털 위안화(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 DCEP) 발행 계획
 - ☆ 유럽연합(EU)·영국·스위스·캐나다·스웨덴·일본 등 6개 국가·지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CBDC) 공동연구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 ☆ 미국 페이스북 :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 주도

II.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의 논의 상황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가상통화 분류

- 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2019.9)
 -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
 - 화폐 등 금융자산으로 분류·적용할 수 없으며, 비화폐성 자산에 해당
- ②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2019.12)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 : 재고자산
 - 기타 : 무형자산

II.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의 논의 상황 4. 가상자산거래 제도와 추진

- ① FATA는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 이행상황 등을 2020년 6월 점진 계획
- ② 우리나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가상자산 규정 마련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통과(2019.11.25.)

II.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의 논의 상황 5. 미국 ·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지침 추가 발표



- Notice 2014-21 (2014.4)
: IRS는 가상통화를 연방 과세목적상 재산(property)으로 보아 세법의 일반원칙 적용, 16 FAQs(frequently asked questions) 형태로 설명
- Revenue Ruling 2019-24 (2019.10)
: 암호화폐 하드포크(cryptocurrency hard fork)의 취득 · 처분, 자선기부금공제(charitable contribution tax deduction)대상, 자신의 소유계좌간 암호화폐 이체 등에 대한 세무처리지침 공표, 45 FAQs로 설명
- 아울러 암호화폐 관련 거래의 미신고 · 허위신고 등에 대하여 벌칙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



- 일본 국세청, 가상통화에 관한 소득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공표(2017.12)
- 가상통화에 관한 세무상 취급에 대하여 공표(2018.11)
- 2019.12 동 내용을 갱신, 32 FAQs
- ★ 가상통화거래에 의한 수입액이 1억엔 이상 납세자
- 2018(2017)년분 : 공적연금을 제외한 잡소득의 수입이 1억엔 이상인 납세자 465(549)명 중 271(331)명

II.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의 논의 상황 6.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이익에 대한 과세

- ⑤ 거주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됨에도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
(2019. 11. 빙썸홀딩스 관계사인 비덴트 공시)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미 이행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1. 과세 필요성

▶ 과세형평성 제고

- ①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이익 발생
 -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매차익이 발생
 - *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 “암호화폐는 모든 사기와 거품의 근원(Crypto is the Mother of All Scams and (Now Busted) Bubbles)”으로 튜립버블과 같다고 비난
- ② 특히 2017년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의 폭증으로 매각이익이 크게 발생한 사실이 있는 등 다른 거래와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과세 필요

▶ 가상화폐의 자산성 인정

- ①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성 인정으로 동 거래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반 마련

▶ 주요국의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 ①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하여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며, 일본의 경우에는 잡소득으로 과세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2. 가상화폐 과세인프라 구축

▶ 가상화폐의 제도화

- ①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 규정 마련 추진 중
- ② 가상자산 :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를 말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i)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i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iii)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iv)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③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 고객확인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의무 부담
 - 무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2. 가상화폐 과세인프라 구축

▶ 법적 성격 정립

- ① 화폐, 통화, 유가증권, 금융투자상품, 일반상품, 지식재산권 해당여부
- ② 재고자산, 무형자산
- ③ 자산성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형사사건이지만 가상통화를 재산으로 파악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2. 가상화폐 과세인프라 구축

▶ 회계기준의 명확화

〈 한국회계기준원 : K-IFRS상 가상통화 분류(2019.12) 〉

- ①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
 -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
- ☆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음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2. 가상화폐 과세인프라 구축

▶ 회계기준의 명확화

〈 한국회계기준원 : K-IFRS상 가상통화 분류(2019.12) 〉

① 판단근거

- 회신대상은 ①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②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③보유자와 다른 당사자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상통화로 한정
- 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
- 질의대상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통화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함
-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 효익이 그 기업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함. 따라서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함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2. 가상화폐 과세인프라 구축

▶ 회계기준의 명확화

〈 일본 企業會計基準委員会 (ASBJ) : 2018.3.14 실무대응보고 제38호「자금결제법에서 가상통화의 회계처리에 관한 당면 취급」 공표〉

① 활성화 시장의 판단 기준

- 활성화 시장은 "지속적으로 가격정보가 제공될 정도로 가상통화거래소에서 충분한 수량 및 빈도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

② 활성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의 가상통화의 회계처리

- 기말에 시장가격에 기초한 가액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시장가격에 기초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처리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2. 가상화폐 과세인프라 구축

▶ 회계기준의 명확화

〈일본 企業會計基準委員會(ASBJ) : 2018.3.14 실무대응보고 제38호「자금결제법에서 가상통화의 회계처리에 관한 당면 취급」 공표〉

- ① 활성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 화폐 등의 회계 처리
 - 활성화 시장가격을 참조할 수 없거나 참조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공정한 가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평가
- ② 활성화 시장의 판단 변경 시의 취급
 - 어떤 가상통화 등이 활성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된 때에는 활성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 지기 전의 마지막으로 관찰된 시장가격에 기초한 가격을 취득원가로 하고, 평가차액은 당기의 손익으로 처리
 - 한편 활성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부터 존재하는 경우가 되었을 때는 시장가격에 근거하는 가격으로 기말평가를 실시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3. 과세원칙 및 세목별 고려사항

▶ 과세원칙

- 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 설계 시 과세원칙
 - 세법의 입법상 지도이념인 공평성(응능부담의 원칙)
 - 경제적 효율
 - 단순 · 명료성 및 경쟁국의 세제 등 글로벌 규범과의 조화

▶ 세목별 고려사항

- ① 소득세
 - 가상화폐의 소재지 및 납세의무자 특정 문제
 - 가상화폐 소득의 구분, 소득금액 산정 및 손익통산 문제
 - 사업소득 : 영리목적성, 독립성 및 활동의 계속성, 업종 분류 문제
 -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 : 일시성 또는 일회성
 - 소득세의 포괄주의로의 전환 문제
 -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소득파악 문제 등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3. 과세원칙 및 세목별 고려사항

▶ 세목별 고려사항

① 법인세

-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포괄적 과세주의
- 가격변동이 심한 가상화폐의 사업연도말 평가손익의 처리문제
- ICO 코인 등에 대한 회계기준 마련 문제 등

② 부가가치세

- 가상화폐와 법정통화 교환거래에 대한 유럽사법법원의 입장
* Skatteverket v. David Hedqvist : 비과세
- 결제수단적 성격 등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추세
-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거래를 비과세로 할 경우 그 이외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
-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과세문제 등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3. 과세원칙 및 세목별 고려사항

▶ 세목별 고려사항

① 상속세 및 증여세

- 사이버 공간 상의 가상화폐의 소재지 문제
- 가상화폐의 시가산정 등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문제
- 동일 가상화폐의 거래소 간의 가격 상이 문제
- 가상화폐의 물납 문제
- 가상화폐 지갑 등 패스워드 지득사실의 입증 문제
- 국세부와 제척기간 조정 문제 등

② 기타

- 향후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자산 포함 문제
- 조세회피방지 문제
- 국세징수법상 압류방법 등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4. 과세방법

▶ [1안]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외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방안

- 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할 수 있음
- ②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부작용이 심하거나 기존 금융질서에 심한 악영향을 주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거나
 - 가상화폐 거래가 일시적 현상으로 조만간 없어지지 않는 한 비과세하는 방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정당성을 찾기가 쉽지 않음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4. 과세방법

▶ [2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 ① 기타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만을 가리킴
 -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 간에 법조경합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으로 우선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임
 -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이루어짐
- ②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구조가 복잡하고 가상화폐가 대부분 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 일반적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음
 -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4. 과세방법

▶ [3안] 거래세 과세방안

- ① 이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포착의 어려움, 거래가격의 큰 변동성, 자산의 성격은 다르나 소액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 가상화폐 거래시마다 간접세 형태인 거래세를 과세
- ② 다만, 외국의 입법례가 없으며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별도의 (가칭)가상화폐거래세법을 새로이 입법하여야 하는 부담이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4. 과세방법

▶ [4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 ①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에 따라 실현된 소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이에 해당
 - ② 자본이득의 개념은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 의하여 한정되며, 자본이득의 발생원천이 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상이
 - 주요국에서도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이지만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으로 보아 자산성을 인정
- ☆ 자본적 자산 : 매매의 목적으로 구입한 재고자산이나 소비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을 제외하고 소득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Ⅲ.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 4. 과세방법

▶ 소결

- ① 제2안(거래세 방안)
 - 취득원가 산정의 어려움 해소 등 징수의 편의성 도모
 - 투기적 거래 억제
- ② 제4안(양도소득세 과세방안)
 - 대주주에 대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파생상품 등의 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과세방식을 유사하게 마련할 수 있어 큰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 가능

Ⅳ.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1. 거래세 방안

법령의 정비

- 가상자산거래세법 제정
- 증권거래세법 일부조항 개정

과세대상

-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의 양도
- 외국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양도 제외

납세의무자

- 가상자산 양도자
- 가상자산 양수인 : 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양도

세율

-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연중 거래되는 점을 감안 증권거래세율 보다 낮게 설정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와 그렇지 않는 거래를 차등화
- ★ 증권거래세율
 - 코스피 : 0.15 → 0.10% - 코스닥 : 0.30 → 0.25%
 - 코넥스 : 0.30 → 0.10% - 장외(K-OTC) : 0.30 → 0.25%
- ★ 비상장주식 : 0.45%

과세방법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
-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소득세법령 개정

- ① 가상화폐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므로 실제 물품이 아니고 유가증권이나 채권도 아니지만 현실의 세계인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
 - 대법원에서도 그 자산성을 인정. 이에 개인이 가상화폐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이익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강구
 - 다만, 소득세법 제94조 상의 항목들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과세가 어려울 것임
- ②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으로 규정하는 방안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화폐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를 신설하는 방안
 - 새로운 법률의 제정 혹은 자금세탁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 이들 법률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내지 개념을 규정
- ③ 소득세법에서 가상화폐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화폐(국회 정무위 통과 : 가상자산)의 개념을 인용하는 방안이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양도소득세 과세거래 및 과세거래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1) 과세거래

- ① 양도소득세는 토지,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
 -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함
- ② 가상화폐의 경우 매도, 교환, 재화·서비스의 구매 등이 양도에 해당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양도소득세 과세거래 및 과세거래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2) 과세거래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① 보유하는 가상화폐의 매도

- ② 이는 과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가격상승시점 등에 원화로 매도하는 경우임.
즉, 가상화폐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와 다름없음

<사례> 201×년 6월 10일 5,000만원으로 5비트코인(BTC)을 구입하여 같은 해 11월 20일에 2BTC를 3,000만원에 매도한 경우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의 매각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소득금액인 양도소득금액이 됨.
즉, 과세소득금액 = 매각가액 - (1BTC당의 취득가액) × (지급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계산하면 3,000만원 - (5,000만원 ÷ 5BTC) × 2BTC = 1,000만원이 과세대상임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양도소득세 과세거래 및 과세거래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2) 과세거래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② 가상화폐로 재화·서비스 구입

- ③ 보유하는 가상화폐로 재화·서비스를 구입한 경우로 그 사용 시점에서의 재화·서비스 제품가액 (원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 포함한 지급총액인 공급대가)과 가상화폐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소득금액이 됨

<사례> 201×년 6월 10일 5,000만원으로 5비트코인(BTC)을 구입하여 같은 해 11월 20일에 3,000만원의 상품 구입에 2BTC를 지급한 경우 과세소득금액은 상품 가액에서 (1BTC당의 취득가액) × (지급 BTC)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이 됨
즉, 3,000만원 - (5,000만원 ÷ 5BTC) × 2BTC = 1,000만원임
그리고 1,500만원의 상품 구입에 1BTC(취득가액 1,000만원)을 지급하고 1,500만원의 상품과 잔액 100만원을 돌려받았을 경우에는 1BTC의 가액이 1,600(1,500+100)만원이 되므로 과세소득금액은 600(1,600-1,000)만원임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양도소득세 과세거래 및 과세거래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2) 과세거래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② 가상화폐로 재화·서비스 구입

- ㉠ 다만, 소비자가 일상용품을 구입할 때마다 가상화폐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양도소득세 과세거래 및 과세거래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2) 과세거래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③ 보유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 구입

- ㉠ 이는 가상화폐간의 교환으로 과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 위의 상품을 구입할 때와 동일하게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한 시점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과세대상으로 됨
- <사례> 201×년 6월 10일 5,000만원으로 5비트코인(BTC)을 구입하고 같은 해 11월 20일에 그 중 2BTC(지급수수료를 포함)로 3,000만원의 10이더리움(ETH)을 매입한 경우 과세소득금액은 다른 가상화폐인 10ETH의 구입가액(결제시점의 시가)에서 보유하는 가상화폐 중 지급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1BTC당의 취득가액 × 지급 BTC)과의 차액이 과세소득금액이 과세대상이 됨. 즉 3,000만원 - (5,000만원 ÷ 5BTC) × 2BTC = 1,000만원임
- ㉡ 이와 같은 가상화폐 간의 교환에 대해서는 거래의 포착은 물론 세액계산이 쉽지 않으므로
 - 가상화폐 간의 교환에 관한 손익을 과세상 인식하지 않고 법정통화와의 교환이나 결제수단으로 이용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양도소득세 과세거래 및 과세거래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2) 과세거래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④ 가상화폐의 분할에 의해 새로운 가상화폐 취득
 - 가상화폐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가상화폐의 하드포크(hard-fork)로 즉 가상화폐가 분할되어 새로운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임

<사례> 비트코인(BTC)의 경우 하드포크를 통해 2017. 8월에 비트코인 캐시(BCH), 같은 해 10월 비트코인 골드(BTG) 등이 만들어진 바 있음
BTC의 분할시점에서는 BCH나 BTG의 거래시세가 존재하지 않아 그 취득금액은 제로(零)로 간주됨

- 따라서 BCH나 BTG를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가 되지 않음
- 다만, 새로운 가상화폐인 BCH나 BTG를 매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그 취득가액은 제로이므로 매도 내지 사용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임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양도소득세 과세거래 및 과세거래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2) 과세거래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⑤ 채굴 및 상속·증여에 의해 가상화폐 취득
 - 채굴을 통하여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경우 과세소득금액은 채굴에 의해 취득한 가상화폐의 취득시점에서의 시가에서 채굴에 소요된 비용인 전력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 채굴에 의해 취득한 가상화폐를 매도 또는 사용한 경우의 과세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가상화폐를 채굴에 의해 취득한 시점에서의 시가로 함
- 그리고 상속·증여에 의하여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기준을 준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 이 경우에도 아래 의제 취득가액 제도의 도입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상화폐는 365일 24시간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시점의 거래가격을 당일 시세 가액으로 특정할 필요
- 상속·증여에 의해 취득한 가상화폐를 매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과세소득금액 산정은 위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등

- ㉓ 가상화폐의 종류 및 거래소가 다양하고 거래빈도가 많은 점, 소비자가 암호화폐로 일상용품을 구입할 때 가상화폐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확정된 이익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 과세연도의 일정 거래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및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
- ① 연간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예컨대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의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안
- ㉔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거래질서를 위하여 바람직
- ㉕ 이 방안은 취득가액이 매우 낮은 경우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연간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동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일정금액, 예컨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소나마 과세형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등

- ㉒ 소액비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 ㉓ 이는 연간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위의 일정금액, 예컨대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동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예컨대 50만원 미만의 경우와 같이 소액인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안임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의 취득가액 산정

(1) 의제 취득가액제도의 도입

- ㉠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개정 세법의 시행일에 가상화폐의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을 명확히 하여 향후 매매 등에 따른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 토지 및 주식 등의 경우에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을 포함)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과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①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②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제외)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의 취득가액 산정

(1) 의제 취득가액제도의 도입

- ㉠ 그런데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위의 토지 또는 주식 등과는 달리 가상화폐의 종류가 너무 많고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며
 - 가상화폐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화폐와의 교환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가상화폐 사업자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제도가 정립되지 않아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찾아내기가 용이하지 않음.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i) 의제취득일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납세자가 의제취득일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
- ㉡ 그런데 가상화폐는 1년 내내 24시간 거래되므로 주권상장법인 주식거래 마감시간인 15시 30분이나 18시 등 일정시점의 거래가액을 당일 시세가액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 ㉢ 하루에도 변동폭이 크므로 의제취득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도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됨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의 취득가액 산정

(1) 의제 취득가액제도의 도입

- (ii) 의제취득일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보유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하거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시점에 거래가액의 일정비율, 예컨대 10% 내지 3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원활한 과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실제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 (iii) 다음으로 상속 또는 증여로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상속 내지 증여 받은 경우
 - 동 가상화폐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이 또한 상속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라야 하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평가기준 마련 전까지는 위의 (ii)의 경우와 같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하거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시점에 거래가액의 일정비율, 예컨대 10% 내지 3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의 취득가액 산정

(2) 가상화폐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 ㉠ 보유하는 가상화폐 등 재고자산은 매입시점에 취득원가가 결정되어 자산으로 인식됨
 - 이후 당해 재고자산이 판매되면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 중 판매된 부분은 비용으로 대체하고 미판매분은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있게 됨
 - 당기 중 가상화폐를 수차례 매입할 경우 매입시점마다 가상화폐의 단위당 취득원가가 동일하다면 판매된 가상화폐의 취득원가 즉 매출원가는 어렵지 않게 파악될 수 있음
 - 하지만 가상화폐의 단위당 취득원가가 매입시점마다 다르면 얼마에 취득하였던 가상화폐가 판매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 이에 따라 동일한 가상화폐의 매입단가가 매입시점마다 다른 경우 당기에 판매된 가상화폐와 당기말까지 미 판매된 가상화폐에 얼마의 매입단가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자산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그러므로 가상통화의 단위 원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중심으로 살펴봄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의 취득가액 산정

(2) 가상화폐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① 이동평균법

◎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은 가상화폐를 매입할 때마다 그 구입수량과 금액을 앞의 잔액에 가산하여 새로운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이것에 의해서 출고단가를 계산하여 기장하는 방법임

- 이 방법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재고자산가액이 평균화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매입가액이 달라짐에 따라 받는 영향이 적은 반면
- 매입회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평균단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단수가 생기며 계산이 번잡하다는 단점이 있음

<사례> 201×년 3월 10일 2,000만원(지급수수료 포함, 이하 동일)에 4BTC를 구입하여, 같은 해 5월 20일 0.2BTC를 110만원에 매도하고 9월 30일에 155만원의 상품구입에 0.3BTC를 사용함. 11월 10일 결제시점에 시가 600만원인 다른 가상화폐 구입에 대한 결제를 위하여 4BTC를 지급함. 11월 30일에 1,600만원으로 2BTC를 구입함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의 취득가액 산정

(2) 가상화폐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① 이동평균법

- 위 사례의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1BTC당 취득가액을 구하면 3월 10일 시점에서는 500만원, 11월 30일에는 633.33만원임.

즉, 3월 10일에 취득한 1BTC당 취득가액은 500만원 ($2,000\text{만원} \div 4$)이며,

3월 1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1.5BTC를 매각 또는 사용하였으므로

11월 30일 BTC 구입 직전에 보유하고 있는 BTC의 장부가액은 1,250만원($500\text{만원} \times (4-1.5)\text{BTC}$)임.

11월 30일에 2BTC를 1,600만원 구입하였으므로 11월 30일 구입 직후에 1BTC당 취득가액은

633.33만원($\{(1,250 + 1,600\text{만원}) \div \text{원}(2.5 + 2\text{BTC})\}$)임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의 취득가액 산정

(2) 가상화폐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② 총평균법

- ◎ 재고자산의 원가를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초의 재고자산 금액의 기중에 취득한 재고자산금액을 합하고 이를 총수량으로 나누어 평균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임
 - 총평균법은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월말 또는 기말에 평균원가의 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고 시 개별원가를 알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적당

<사례> 위 사례를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1BTC당 취득가액을 구하면 600만원이 됨. 즉, 1년간 취득한 BTC의 취득가액의 총액(2,000 + 1,600만원)을 1년간 취득한 BTC 매수(4 + 2BTC)로 나누면 1BTC당 취득가액 600만원이 산출됨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의 취득가액 산정

(2) 가상화폐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③ 소 결

- ◎ 실제 가상화폐를 거래소 등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기준기간 전체의 매입금액 합계를 매입수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법인 총평균법이 계산이 편리할 수 있음
 -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발생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계산의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의 취득가액 산정

(2) 가상화폐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③ 소 결

- ② 다만, 총평균법의 경우 기간 도중에 과세소득액을 파악할 수 없는 등 경제적인 실태와 괴리될 수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일정기간 계속 적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라도록 하는 것도 무방할 것임
 -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IT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계산의 변잡성이라는 이동평균법의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생각됨
- ☆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채권 이외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의 평가방법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라도록 되어 있음
- ②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재고 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함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양도차손의 공제 및 이월공제 허용 문제

- ② 가상화폐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금액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익 통산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양도소득금액은 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②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③ 파생상품 등의 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 가상화폐 등의 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임. 즉, 가상화폐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손의 공제는 암호화폐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②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함
 - 향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문제와 이월공제 허용여부는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가상화폐 가격의 급락 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양도소득기본공제

-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함
 - 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②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 ③ 파생상품 등의 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 ② 따라서 가상화폐 등의 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도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체계

- 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구분하여 별개로 세액을 계산하고 있으며, 이에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최저 6%에서 최고 42%의 7단계 초과 누진세율)과는 달리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i) 토지·건물,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조합원 입주권 및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에서 42%로 7단계 초과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음
 - (ii)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로서 ① 중소외의 법인(1년 미만 보유)의 주식은 30%,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③ 중소기업 주식은 10%, ④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0%임. 기본적으로 20%를 기준으로 하면서 5%~10%p를 가감
 - (iii) 파생상품 등에 대한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0%로 함. 다만,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재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단력세율은 10%로 하고 있음. 위 3가지 유형에 따른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봄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체계

(1) 각 대안의 검토

- ① 제1안 : 토지 등과 같은 초과누진세율(6%~42% 7단계) 적용
- ② 소득세는 각 개인의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한 조세로서 공평한 과세를 달성할 수 있음
 - 일본은 가상화폐의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최저 5%에서 최고 4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 ③ 다만,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관련 법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조세회피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증대되어 오히려 과세의 불공평을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④ 그 밖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 파생상품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체계

(1) 각 대안의 검토

- ② 제2안 : 주식 등과 같은 비례세율(10%~30% = 20% ± 10%) 적용
- ③ 가상화폐는 주식과 그 법적 성격은 상이하나 거래빈도 등 거래형태가 유사함
 -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와 그 밖에 거래소 이외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이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거래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하게 생각하여 친속하게 여겨 짐
 - 아울러 비례세율에 의한 과세의 편의성은 물론 초과누진세율 보다 도입초기에 따른 납세자의 심리적 중압감 및 조세저항도 완화 가능
- ④ 제2안을 적용할 경우 가상화폐는 주식과 같은 대주주 및 중소기업 개념 등이 없으므로 세율적용은 기본적으로 20% 비례세율로 하되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5%로 하는 방안과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에는 비례세율 20%로 하고, 그 밖에 해외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5%~10%p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체계

(1) 각 대안의 검토

- ③ 제3안 : 파생상품 등과 같은 비례세율(탄력세율 10%) 적용
- ④ 제2안과 동일하다고 사료되며 파생상품 등에 대한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본세율 20%에서 탄력세율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 자본시장육성 등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 20%로 하는 것이 바람직

IV. 가상화폐 구체적 과세방안 2. 양도소득세 방안

▶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체계

(2) 소 결

- ④ 일본의 경우 세무전문가 그룹이 자금결제법에 의한 국내 등록 교환사업자에 의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이익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20%의 신고분리과세, 그 밖에 해외 거래소 등에서의 거래는 현재와 같이 잡소득으로서 취급하는 방안을 제안
 - 이를 통하여 참여자 증가에 의한 시장 활성화, 전체 세수증가와 더불어 비등록사업자나 해외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닌 본인확인 의무가 부과되는 국내 등록교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되는 자금세탁 등의 대응측면에서도 건전성 향상이 기대
- 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방안 중에는 제2안을 제안
 - 제2안 중에서도 주식과 같이 국내외거래소 차별없이 적용세율은 20% 비례세율로 하되 과세표준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컨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5%로 하는 방안 등 검토

V.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의 과세문제 1. 사안의 개요

▶ 개 요

- ①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B사에 대하여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
- ② 비거주자가 B사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뒤 출금한 원화예수금(3,325억원)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 B사가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

V.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의 과세문제 2. 과세관청의 과세근거

▶ 과세대상

- 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 ② 근거조문
 -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 :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소득세법 119조 12호 타목 :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

- ①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6항
 - ☆ 법 119조 제11호(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함

V.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의 과세문제 3. 사안의 쟁점

▶ (1) 가상화폐의 자산성 여부 문제

- ① 가상화폐의 세법상 정의 규정의 정립 문제
 - 한국회계기준원 : 재고자산, 무형자산
- ②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타목의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 국내에 있는 자산에서 자산성 인정문제
 -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아이템 거래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무체물을 의미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 가상화폐 역시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형태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 인정(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2)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에서 '부동산 외'의 해석 문제

- ①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양도소득의 범위 중 제1호(토지와 건물)를 제외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에 한정된다는 견해.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국내원천소득) 제12호 중 제3호(국내원천 부동산소득), 제9호(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 및 제11호(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등 제외
- ② 동산에 한정된다는 견해
- ③ 부동산(토지 및 정착물) 외의 모든 유·무체물을 의미한다는 견해 등

V.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의 과세문제 3. 사안의 쟁점

▶ (3) 국내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문제

- ①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가 그 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국내자산 또는 국외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 문제
 - 보유자의 주소(거소)지, 지갑주소의 서버 소재지 등

▶ (4) 과세요건 명확주의 문제

- ① 가상화폐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문제
 -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 및 국내에 있는 자산의 범위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범위의 포괄성으로 자칫 자의성이나 재량의 여지를 주지는 않는지

▶ (5) 행정입법의 부작위 문제

- ①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 후단(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정하지 않아
 - 후단과 전단과의 유기적 해석의 어려움으로 전단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V.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의 과세문제 3. 시안의 쟁점

▶ (6)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문제

- ① 가상화폐 거래소가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56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 ③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6조 제6항을 준용, 가상화폐 거래소를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로 볼 수 있는지

V.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의 과세문제 3. 시안의 쟁점

▶ (7) 과세소득 산정 문제

- ① 비거주자의 원화예수금 출금합계액(3,325억원)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총수입금액에 대한 과세근거 등

☆ 양도소득 :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

- 경제적 이익에 의한 소득 :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동법 119조 12호 카목)

▶ (8) 과세소득의 구분문제

- ①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 및 타목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면 마목과 타목의 소득구분을 각각 어떻게 하였는지

V.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의 과세문제 3. 사안의 쟁점

▶ (9) 비거주자 판단문제

- ① 과세관청 :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의 휴대전화 번호로 비거주자 여부 판단
 - 거래소 :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아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할 수 없다는 입장
- ②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내·외국인 구분에 대하여 2017년 12월 이전에 가이드라인 제시 등 행정지도 없음
 - ☆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도입(국무조정실 2017.12.28 보도자료, 2018.1.30 시행)

▶ (10)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권 인정 문제

- ① 조세조약상 가상화폐 거래이익에 대한 과세권 제한은 없는지
 - 체결국별 검토 필요성
-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상 비거주자가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B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지

V.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의 과세문제 3. 사안의 쟁점

▶ (11) 기타

- ①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 적용가능성 문제
 - 세법의 해석이나 국제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② 거주자에게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에게 과세하는 실의 문제
 - 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열거주의)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음에도
 - 비거주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상대국과의 조세마찰의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지
 - OECD 모델 조약 상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V.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의 과세문제 3. 시안의 쟁점

▶ (12) 향후 검토과제

- ② 비거주자가 보유중인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가상화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법적안정성을 제고하여 조세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부여, 가상화폐 소재지 등
- ③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가상화폐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양도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방안 등 검토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주식·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주식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 등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소득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VI.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한 과세문제



VII. 결 론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

- 가상화폐 및 ICO 코인(토큰)의 법적 성격 규명
- 자금세탁방지
- 국내 관계부처간 공조 강화,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등, 국가간 협력방안 적극 모색 등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 구축

-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등
부여
- 부과재척기간 장기화 등 관련 세법 규정 정비
- 조세회피 방지방안
- 가상화폐 평가기준 등 체계적인 회계기준 마련 등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의 제도권 편입에 따른 바람직한 과세방향 검토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암호화폐 과세방안에 관하여 누구보다 오래 전부터 관심을 두고 깊고 폭넓게 연구해 오신 김병일 교수님의 귀중한 발표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발제자께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전개를 전제로,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하기에 앞서 각국의 과세동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세형평성을 근거로 과세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세목에서 고려될 수 있는 과세원칙을 짚으신 다음, 구체적인 과세방법으로 4가지 안을 제시하고 (1) 거래세로 과세하는 방안(제2안)과 (2)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제4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방안의 현실적인 적용방법에 관하여 놀랄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고려하여 기존 과세체계에서 특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 주셨습니다.

1. 과세방안에 관한 소견

(1) 암호화폐의 자산(資産)성 공인(公認)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개별 케이스에 가서는 논자에 따라 논의가 다소 분산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로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돈)가 아닌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의견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자께서도 소개하셨습니다. 이미 2019. 6.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①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되, ② 그 외의 경우에는 무형자산(intangible)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논란이 되었던 화폐나 금융자산으로는 분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준을 확립하였

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도 2019. 12. 위와 같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견과 동일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대법원 또한 이미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서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과 관련된 비트코인에 대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과세에 있어서도 일응 그간의 “화폐성”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거래세 방식으로의 접근에 반대

발제자께서는 과세방안에서도 배격하고 있는 부가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는, 우리 대법원이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거래, 소비되는 게임머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업자의 게임머니 매도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한 바 있어, 그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종의 고전적인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금지금(골드바)에 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는 큰 논란 끝에 현재 부가세가 부과(매입자 납부제도)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암호화폐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머니는 실제 가상적인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임아이템과 동일선상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발행방법과 주체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게임머니는 사업자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파는 것이지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생성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채굴이 가능하고 총 발행량도 한정되어 있음)가 있어, 위 대법원 판례가 암호화폐에도 적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지금 또한 일종의 화폐적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실물”로 거래될 때에만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외거래는 있어도 실물거래는 관념하기 어려운 암호화폐가 같은 선상에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발제자가 소개하신 것처럼, EU사법재판소가 암호화폐와 법정통화 교환거래에 대하여 부가세 부과세를 선언(Skatteverket v. David Hedqvist)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 등이 부가되어 실제 부가가치(수수료)를 발생시키는 중개거래, 대출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행 상장주식 시장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세 부과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봅니다. 이미 지난 2010년 표준화된 파생상품(주식선물, 옵션 등) 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영한 교수님과 함께 이 자리(국회)에서 이미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소상하게 개진한 바 있는 토론자로서는, 시장을 파괴하고 사회적·재정적으로도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양산하며, 소득에 비례하는 실질 과세, 형평과세를 실현하지 못하는 거래세 방식에 다시 한 번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거래시장이 주식선물이나 옵션처럼 통일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모든 거래가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활성화된 거래시장에만 거래세를 부과하여 겨우 생성된 시장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생각에는 반대합니다. 거래세 부과, 활발한 거래를 조성하고 가능한 투명하고 규모 있는 시장으로 집중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양성화 하겠다는 정책방향과도 정반대의 길일 뿐 아니라, 아래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금융시장에서 집중포화를 맞아 이미 상장주식에 시장에서도 폐지의 길을 걷고 있는 증권거래세와 같이 장기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로 개편해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세법을 굳이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에도 거래세 방식으로 접근한 전례(前例)가 없다는 점도 좋은 논거입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미 현행 세법상 부득이 그렇게 과세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입법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역시 본질적(=경제적)으로는 거래세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는 총수입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결국 과표와 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일 뿐, 실제 발생한 투자손실을 반영하

거나 개별 납세자 별로 다른 (그러나 같은 잡소득에 속하는) 손익과의 통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래세 과세방식과 동일한 문제점들을 야기합니다.

(3) 소결: 양도소득 과세의 당위성

발제자를 포함하여 많은 논자들이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増加説)을 취하고 있으므로,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인과세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예컨대, 지난 금요일 조세정책학회에서 이루어진 토론에 따르면, 발제자, 홍기용, 김정하, 전영준, 장재형 등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과세에 있어서 굳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체로 자본이득(capital gain) 과세로 처리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특이하게 일본에서 암호화폐 소득을 잡소득(雑所得, miscellaneous income)으로 처리하고 있는 까닭은, 일본의 경우 잡소득을 통해 소득세 포괄주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파생상품 소득 등도 잡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손실을 반영하거나 다른 소득과의 통산 등도 허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일본의 예에 따르면, 그 이름이나 껍질에만 현혹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식으로 이를 소화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양도소득 실현(realization)의 시점과 취득가액의 세법상 평가

양도소득으로 과세에 접근한다고 할 때 암호화폐 과세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어려운 지점은 “양도”와 “취득” 양 쪽에서 그 시점과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그 속성이 확립되긴 하였지만) 일종의 “화폐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交換)된 경우 이를 세법상 “양도”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대두되는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보통 세법에서 소득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금화(=법정화폐로의 가치환산)가 이루어지는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경우 (1) 좀 더 신뢰성이 높고 유동성이 좋은 기축 암호화폐(예컨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교환되는 경우와 (2)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우를 처분으로 볼 것인지, 다양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가 있거나 아예 시가가 없는 코인(ICO로 새로 발행된 코인)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발제자께서 발제문 제9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본의 선례를 좀더 깊이 스터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는 2018. 3. 14. 실무대응보고 제38호에서 “활성화 시장”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활성화 시장”이 존재하는 암호화폐와 그렇지 않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법인 회계상 당기손익 처리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일본은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간의 교환시점에도 원칙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대신, 암호화폐 자체의 거래에 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론적 일관성을 확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취득가액에 관해서도 같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발제자께서 이미 세심하게 여러 경우를 전제하여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특히 일본 여당이 2018. 12. 14. 발표한 『2019년 세제개정대강』에 따르면, 기존 국세청의 FAQ 양식으로 존재하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암호화폐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조문으로 명문화 하였다고 합니다.

3. 금융소득 포괄과세 체계개편과의 연계

토론자로서 마련해 주신 귀중한 자리를 빌어 꼭 당부 드리고자 하는 바는, 부과제척기간이 다하여 부득이 과세를 하여야 하는 과세관청과, 장기적으로 입법을 고민하는 세제실 내지 국회는 그 시야의 지평선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상반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최운열 의원님의 초청으로, 9월에는 여야합동 정책세미나의 형태로 국회에서 금융소득 과세체계 통합개편(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를 기조로 한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의 확대, 장기적인 자본소득 과세와 이원적 소득세제)에 관하여

발표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미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과세가 이루어진 하였지만 국세청의 조치에 압박을 받아 당장 편리한 거래세나 기타소득으로 일단 과세부터 하고 보자는 조급한 생각은 부디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념적으로는 세수의 일실이나 형평의 훼손이 일시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선부른 입법으로 이를 다시 고치기 위하여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그에 비해 훨씬 더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입법 당시 깊은 고려 없이 부유세처럼 책정된 증권거래세와, 거기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붙은 농특세가, 이제는 조세중립성과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자본이득 통합과세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상장주식 과세체계 개편에 있어 일본이 10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변신을 꾀했듯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성급하게 과세부터 하고 보는 것보다는, 세심하게 상장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 큰 틀에서 단계적으로 자본소득 통합과세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에서 과세에 통합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시대에 발맞추어 통합 자본시장법을 만들고도, 여전히 상장주식은 상장주식대로, 채권은 채권대로, 펀드는 펀드대로,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대로, 일관된 논리도 없이 조각조각 난 금융소득 과세체계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한 전례없이 기형적인 과세체계와 더불어, 치유와 통합은커녕 더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세수도 손해보고 금융기관과 납세자들로부터도 비난받는 낙후된 세제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과세방안 토론회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

1. 주요국가의 가상화폐 과세현황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의 경우 스위스를 제외한 주요국가의 과세당국은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asset 혹은 property)으로 파악하여,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함¹⁾
- 미국은 미국 국세청(이하 'IRS')에서 2014년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이후,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에서 체인 스플릿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18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과세 처리 방침이 공표된 상태임
 - (가상화폐의 속성)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파악함
 - (가상화폐 거래)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한 경우엔 과세 측면에서 법정화폐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됨
- 영국 과세당국(HMRC)은 2018년 12월 정책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의 속성에 대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가상화폐 거래)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거래의 빈도와 형태 등을 통해 해당 거래가 금융거래(financial trade)인지 아니면 투자(investment)인지를 우선 구별해야 함
 - 만약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가상화폐 매매차익은 개인의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분류되고, 투자에 해당한다면 자본이득(capital gain) 과세 대상임

1) 이재화, “주요국 가상화폐 과세 현황”, 국회 입법조사처, 2019.7.

- 독일은 가상화폐를 일종의 ‘경제적 자산’(economic asset)으로 파악함
 -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 23조에 따라 사적판매거래(private sales transaction)로 인정되어 가상화폐를 1년 이상 보유 시 자본이득(capital gains) 과세가 면제되며, 1년 이내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도 거래 규모가 600유로를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거래규모가 600유로를 넘는다면 독일의 자본이득(Abgeltungsteuer)에 대한 세율인 25%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사회적 연대 세금이 추가되므로 해당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실제 26.375% 세율이 적용됨
- 스위스는 가상화폐를 현금 내지 동산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개인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포함시킴
 - (가상화폐 거래)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재산세)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가 없는 반면, 가상화폐를 현금 내지 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개별 주(canton)에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 규모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함
-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잡소득)으로 분류하여 최대 55%의 세율을 부과하면서 탈세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일본은 한국이 열거주의에 따라 8가지 항목으로 소득세 부과 수익을 제한한 것과 달리 모든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가상화폐로 발생된 수익 역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됨
 - 일본 국세청은 2017년 9월 가상통화를 사용해 생긴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해서 기타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구분한다는 공식 의견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에 따라서 5~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자체 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10%까지 더해지므로 최대 5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55% 고율 과세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며 2019년 3월까지 과세 당국에 미신고된 가상화폐 수익이 10억 엔(약 1,084억 원)에 달한다는 아사히신문 보도가 나오기도 함
- 탈세를 막기 위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IT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준용하는 것임
- 주식거래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서 일본 과세당국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 하며, 세율은 20.315%(국세 15.315% + 지방세 5%) 단일세율을 적용함
- 일본 정부는 탈세 방지를 위해 세율 인하보다는 엄격한 감독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반해, 민간 IT업계는 정부가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감독보다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

2. 현행 세법에 의한 가상화폐 과세 이슈

(1) 과세 개요

- 국세청은 2019년 12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B사에 대하여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
 - 비거주자가 B사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뒤 출금한 원화예수금(3,325억원)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B사가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
- 과세대상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 근거조문

-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소득세법 119조 12호 카목: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 암호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6항

- * 소득세법 119조 제11호(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핵심 쟁점

□ 과세대상 여부

– 암호화폐의 자산성 여부 문제

- 암호화폐는 신종자산으로서 화폐인지, 유가증권인지, 재고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 등에 대한 세법적 측면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국제적으로도 최근인 2019년 6월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결론

– ‘국내자산’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과세가능한지 여부 문제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그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국내자산’이란 용어는 포괄적이고 광범한 단어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대상의 명확성과 상치될 소지가 있음. 예를 들어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구체적 사안의 적용에 있어 상속세법에서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거주자는 과세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문제
 - 거주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거주자에게 과세를 우선한 것은 내외국인 차별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음
 - OECD 모델조약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원천지국은 타방계약국의 국민(또는 거주자)에게 동일한 요건 하에서 자국의 국민(또는 거주자)보다 과중한 조세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무차별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B사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되는데, B사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
-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B사는 대리 또는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 소득세법 제156조 제6항에서는 유가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B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 대법원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법률의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인정하지 아니함

3. 향후 가상화폐 과세방안

□ 가상화폐에 대한 향후 과세방안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 양도소득세 과세

- 주요 외국은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자본이득(capital gains)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조세이론상으로도 가상화폐의 거래이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

① 가상화폐의 주요한 특징은 익명성으로서, 과세거래의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 내용의 파악이 용이하나, 장외거래 이용자는 거래 내용의 파악이 곤란하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산정이 어려움

②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부동산을 제외한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거주자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비거주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기타소득세 과세

-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복권당첨소득 등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인데,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가상화폐 거래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리상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주요 외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데, 장외거래의 경우 거래 내용의 포착이 어려운 문제가 상존

- 현행 소득세법에는 비거주자의 경우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취

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거래자는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순소득과세원칙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이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에 따라서 5~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 10%까지 더해지므로 최대 5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가상화폐 거래의 음성화 등 탈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거래세 과세

-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임
-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에 대해 상장주식은 0.25%, 비상장주식은 0.5%(2020. 4.1. 이후는 0.45%)의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음.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10~30%)도 과세되고 있어 중복과세라는 비판이 있음
-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과세하는 논거는 아직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과세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는 거래금액에 대해 낮은 수준(예: 0.1%)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이후 과세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주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전환

□ 검토의견

- 양도소득세는 조세원리상 타당하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으나, 과세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 기타소득세는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로서 조세원리상 맞지 않는 문제점과, 주요 외국의 경우 대부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과도 상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 가상화폐 거래의 현실을 감안하여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하여 과세인프라 정비와 세수확보를 해나가면서, 향후 과세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가상화폐 과세방안

토론 :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목차

1. 가상화폐의 현행법상 성격
2. 가상화폐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상취급(1) ~ (5)
3. 주요국의 과세상 취급의 요약
4. 가상화폐의 과세방안
 - 1) 소득세 과세방안
 - 2) 법인세 과세방안
 - 3)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안
 - 4)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2

가상화폐의 현행법상 성격

| 구분 | 해당여부 | 관련 법률 조항 | 이유 |
|--------|------|--------------------|--|
| 법화 | X | 「한국은행법」 제47조, 제48조 |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짐 모든 거래에서 무제한 통용될 근거가 없음 |
| 외국통화 | X | 「외국환거래법」 제3조 | 외국 정부가 공급하는 법화가 아님 |
| 전자지급수단 | X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공급인 없음, 환급성 보장 안됨 |
| 금융투자상품 | X | 「자본시장법」 제3조 | 투자약정 없음 |

출처 : 한국은행,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한국은행, 2018, 21면 [표Ⅱ-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물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출처 : 대법원 2018.0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3

가상화폐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상 취급(1)

• 미국

-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통화가 아니라 자산(property), 즉 법률상 자산인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그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조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4

가상화폐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상 취급(2)

• 영국

- 가상화폐 채굴, 거래, 교환, 결제, 기타 서비스 제공업자와 같은 사업자들은 가상화폐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소득의 처리와 요금에 관한 활동은 과세대상.
 - 법인은 가상화폐에 대해 외환 및 대출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하여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과세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상화폐의 거래를 통한 소득은 일반적 소득세로 과세하고, 자본이득세 역시 현행 자본이득세로 과세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채굴을 통해 받는 것은 경제활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채굴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금융거래로서 비과세. 가상화폐가 법화다 외화 등 기존 통화와 교환될 때 가치화폐의 가치 자체에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음. 재화와 서비스와 교환될 때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통상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

5

가상화폐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상 취급(3)

• 독일

- 2013년 연방은행법 제1조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취급. 주식 또는 채권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의 매매에 대해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투기목적인 경우에는 과세함.
- 부가가치세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가상화폐를 대가로 지불한 소비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가상화폐를 현실의 통화와 교환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판단함.
- 2018년 독일은 자국 내에서 가상화폐가 지급 결제수단으로 쓰일 경우 별도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취급함. 이는 2015년 10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결에 근거함.

6

가상화폐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상 취급(4)

• 호주

- 2014년 8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상 취급.

➤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 :

- ✓ 가상화폐를 처분할 때 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본이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할 수 있음. 그 처분이 사업의 일부라면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납세자가 투자자산으로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 가상화폐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 ✓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매매나 교환을 위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이득 규정이 아니라 **주식거래** 규정을 적용함. 가상화폐의 판매수익은 일반적 소득이며, 거래 주식으로 보유하는 가상화폐의 취득원가는 차감할 수 있음.
- ✓ 가상화폐의 사업이 아닌 사업의 일부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 그 가상화폐는 물물교환 거래에서 받는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함.
- ✓ 가상화폐의 판매와 구매는 2017년 7월 1일부터 소비세의 적용을 받지 않음.

7

가상화폐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상 취급(5)

• 일본

- 2016년 자금결제법이 개정되어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가상화폐를 현금과 동등한 법적 지불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세제개정에서는 소비세는 자금결제법상 '가상화폐'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함. 그리고 가상화폐를 매각하거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하고,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세율은 15~55%로 누진과세함.
- 2018년 국세청이 가상통화에 관한 세무상 취급에 관해 공표. 2019년 세제개정에서는 법인세 과세문제를 구체적으로 정함.

8

주요국의 과세상 취급의 요약

- 주요국들은 세법상 가상화폐의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 다양하게 해석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여 부과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상화폐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세법상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 가상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9

가상통화 과세방안

- 1) 소득세 과세방안
- 2) 법인세 과세방안
- 3)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안
- 4)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10

소득세 과세방안(1)

- 가상화폐를 대법원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본다면 소득세법 21조 7호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임.
 - 최근 신문보도(뉴스퀘스트, 2020.1.20.)에 의하면 가상화폐에 관한 기획재정부 내 담당 조직을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꾸어 가상화폐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것으로 추측됨.
- 가상화폐를 영리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예컨대 사업용 자산으로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결제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때에 발생하는 손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사업으로 행하여 얻는 이익도 사업소득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가상화폐 채굴업', '가상화폐 중개(교환)업', 가상화폐의 매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 과세 대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음.

11

소득세 과세방안(2)

- 가상화폐의 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매매차익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다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와 같이 하는 경우 금, 외환, 채권, 주식의 매매차익(대주주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가상화폐의 양도소득 과세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발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을 선호하되, 양도차손의 공제는 암호화폐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결손금의 이월공제 허용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허용하고, 세율은 주식 등과 같은 차등비례세율을 채택하자는 입장임.
-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이익의 과세(원천징수)문제
 - 발제자로 26면 이하 상세한 기술있음. 현재 권리구제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과세 여부에 관해 결론이 나겠지만, 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이익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현재 논의중임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12

참고 -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내용

| 구분 | 내용 |
|----------|--|
| 대상 |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 해외 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
| 양도차익의 계산 | 선물과 옵션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 수식으로 되어 있음. |
| 세율 | 11%(지방소득세 1% 포함) |
| 구분계산 | 다른 양도소득(부동산 및 주식)과 구분하여 별도계산(기본공제 250만원 별도 적용) |
| 신고납부 | 예정신고 면제, 다음해 5월 연 1회 확정신고납부 |
| 거래내역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거래내역 제출 |

출처: 김용민 외 2인, 2019 금융상품과 세금, 409면 <표 3-56>.

13

법인세 과세방안

-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포괄적 소득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상화폐를 통해 소득을 실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됨.
 -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업체의 경우, 채굴소득 전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 다만 법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보유에 따른 평가손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가상화폐의 자산가치 평가 등 회계기준마련이 필요함.
 -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 가상화폐를 보유목적 및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1년 이상인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14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안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이므로 현행법상 가상화폐도 그 법적 성격에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가상화폐를 상속 및 증여재산으로 파악하는 경우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음.

15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비트코인을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상품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
 - 유권해석 : 서면법규과 - 920(2014.8.25)
 - <제목> 거래용 가상화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요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채굴업자가 획득한 가상화폐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 인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16

암호화폐 관련 김병일 교수님 발제에 대한 토론문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논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신 김병일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쟁점들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과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고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쟁점들을 상세히 발제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세율, 과세 대상 산정, 과세 관행, 원천징수 등 많은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만약 소득 과세가 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점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거래세로 과세하는 등 다른 방안은 없는지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세방안과 각계에서 제기되는 과세방안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과세를 전제로 논의가 제기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앞서 전제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상 법인이나 개인의 사업체가 취득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득은 지금도 과세라는 것입니다.

순자산증가설이 적용되는 부분은 법인이나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개인들이 책상이나 외환(예: 태국의 바트화)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암호화폐는 왜 과세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시선으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이나 각국의 과세 입법례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가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루기는 했지만, 암호화폐의 이중적인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안정적인 분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이라면 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각국의 입법례나 과세 관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의 일부로 처리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의 빚썸에 대한 과세는 유가증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과세는 어떤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식만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일반적으로 거래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나 다른 종합소득과의 소득 통산은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일반 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세하고 증권거래세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세제도를 가진 것은 주식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양도차손의 이월공제나 종합소득 통산을 인정할 경우 실제 세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는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을 과세한다면 암호화폐의 가치를 그때그때 평가하거나 어떤 가정 하에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암호화폐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이월 공제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하여야 합니다. 암호화폐의 거래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나 소득 통산을 허용한다면 다시 일반적인 주식의 거래손실은 왜 이월공제나 소득 통산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게 됩니다.

만약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이 아니라 단순한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이라면 사업자의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동 암호화폐의 거래가 국내거래인지 사업자는 누구인지 해외에서 소비된다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왜 일반적인 외환의 거래나 개인 간의 물품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요컨대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의 암호화폐 양도차익을 과세한다면 왜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왜 아직도 주식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만 과세하는지 또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장기간 부분적인 과세만 하고 있는지 암호화폐의 사례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는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하더라도 소득세보다는 거래세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문에서 기존의 논의에서부터 최근까지 가상통화 또는 암호자산에 관한 동향과 추세를 정리하고 이에 따라 과세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음.
 - 토론문은 과세방향 측면에서 제시한 방향에 관하여 내용과 세율체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기술해보고자 함.

1) 과세방향에서의 검토

- 발표문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차익의 과세에 대해 제시하는 과세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됨.
 - 1안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바, 소득에 대하여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균형적인 과세 체계를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발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상통화가 P2P 거래에 이용될 것을 이미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소득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2안의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향인데, 이는 가상통화 거래 성격에 그대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음.
 - 기타소득은 자산 이전 소득에 기초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일시적인 소득 성격을 가진 열거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무형자산(저작권, 저작권이 실체된 자산 <영화필름 등>, 산업재산권, 산업상 비밀 등)의 양도 또는 사용대가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에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대상들에 대한 자산 양도가 반드시 일시적, 우연적인 것이라 기타소득에 열거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한편, 회계 기준상에서는 발표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으로 보지만, 이는 현행의 회계 기준상에서 부합되는 부분이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¹⁾ 가상통화를 기존의 무형자산과는 다른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임.
-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더라도 용이한 부분이 있겠으나, 기타소득 내 각호에 열거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됨.
- 3안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유사하게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나, 해당 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한계점들이 있음.
 - 해당의 안은 거래되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그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에 대해서 과세함으로써 수익에 대해 우회적인 조세부담을 주는 것임.
 - 발표문에서 한계로 제시한 거래세법 입법에 대한 부담 이외에도 거래세법 설계 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 있는 바, 거래소 기업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동일한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P2P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남는 등 어려운 부분이 있음.
- 4안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과세방향이라 생각됨.

1) 제6회 한국회계기준위원회(2019. 4. 26.) 회의결과 사항을 살펴보면, 회계기준위원회 논의 내용은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개념 문안에 부합되어 해당 사항으로 분류는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무형자산과는 다른 특징(투자 및 결제수단)이 있어서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결과가 목적 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한국회계기준원, “제6회 회계기준위원회(2019. 4. 26.) 회의결과”, 2면, http://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061&bbsSeq=31245 (2020. 2. 1. 최종방문)

-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서 과세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므로 가상통화 거래에서의 차익을 과세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정하여 마련할 수 있는 방안임.
- 다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제도적 정비와 설계 사항이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사전으로는 4안을 우선 생각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되나, 그렇지 않다면 2안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됨.

2) 세율 체계 측면에서의 검토

□ 발표문은 세율체계를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제시해보고 있음.

- 발표문에서는 7단계 누진세율 체계(1안), 2단계 누진세율 체계(2안), 비례세율 체계(3안)를 제시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비례세율을 채택하고자 하나 일정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 2단계 누진 체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가미된 2안의 내용, 단일세율로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체계인 3안이 각각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다만, 2안과 같이 2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구성한다고 할 경우에 난점이 있음.

- 누진세율 체계를 만든다고 가정할 경우에 대해서 난점은 세율 단계 구간을 나누는 문턱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대주주인 경우에 과세표준 3억을 초과하면 25%, 그렇지 않으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임.
- 주식 기타 출자지분의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의 구간을 나누는 기준금액이 특정 금액(주식의 경우라면 3억원)이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가상통화의 경우에는 주식 및 기타 출자지분의 과세에서 운영되던 일련의 경험 축적이나 실증연구 축적을 하지 못한 난점이 있음.

- 실증연구를 통해서 문턱 값을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는 있으나, 지금의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 개인적으로 세율의 경우에는 오히려 파생금융상품과 같이 단일비례세율 형식의 접근 방향을 두되, 투기 성향이 단기적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탄력세율 장치로 세율을 올리는 구조를 선택하는 3안의 방향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 발표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행정 인프라 경험 이 가상통화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 단일세율체계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됨.
- 회계기준위원회 등의 견해와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상통화의 성격은 일반적인 무형자산과 금융자산 간 스펙트럼에서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데, 이를 어느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견해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생각됨.
- 일반적인 무형자산과의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출발해본다면, 무형자산에서 파생된 새로운 무형자산 유형으로 보아 접근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서 파생금융상품과 유사하게 다루는 접근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됨.

3) 기타

-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차익은 국내 원천의 비거주자 기타소득(舊 소득세법 제 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현행 타목>)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자 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됨.

- 가상통화가 자산이라 보기 때문에 발표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내’에 있는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 부분이 있음.
- 국내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세 조약상 기타소득 관련 조항이 우선 적용되며,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²⁾
- 비거주자인 소득자들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이 있는지 또는 체결된 조세 조약상 기타소득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만약 조세 조약상 기타소득에 관한 조항 내용이 없거나 체결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라면 국내 세법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설 수 있지만, 조세 조약상 기타소득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2) OECD 모델 조세협약 주석서를 살펴보면, 조세조약상 규정하지 않은 기타소득에 대해서 모델 조세협약 제21조가 적용되는데, 해당 소득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거주지국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음(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017, Commentary on Article 21 ¶ 3).

감사의 말씀

글로벌금융학회 활동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법인회원, 후원기관 그리고 학회 참여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정부, 감독기관, 학계, 기업,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 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인회원, 후원 및 참여기관

| | | |
|---|---|--|
|  IBK 기업은행 |  KB 국민은행 |  KDB 산업은행 |
|  Standard Chartered SC제일은행 |  신한금융그룹 |  우리은행 |
|  KEB 하나은행 |  BNK 금융그룹 |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
|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  KSD 한국에탁결제원 |  OK 금융그룹 |
|  pepper 페퍼저축은행 |  SJ Venture Investment, Inc. |  SGI서울보증 |
|  pwc 삼일회계법인 |  KRX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  은행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BANKS |
|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  손해보험협회 |
|  여신금융협회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  한국금융연수원 KOREA BANKING INSTITUTE |
|  NH농협금융 |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SAMSUNG 삼성증권 |
|  koscom |  KYOBO 교보생명 |  Cigna 라이나생명 |
|  KDIG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  kif KOREA INSTITUTE OF FINANCE |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중소벤처기업부 | | |

